동아투위결성 관련 기록물
(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 : 1975년 3월 17일)

우리는 오늘날 우리 사회가 처한 미증유의 국난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이 언론의 자유로운 활동에 있음을 선언한다. 민주사회를 유지하고 자유국가를 발전시키기 위한 기본적인 사회기능인 자유언론은 어떠한 구실로도 억압될 수 없으며 어느 누구도 간섭할 수 없는 것임을 선언한다. … (동아일보사기자일동,「10.24 自由言論實踐宣言」, 1974.10.24)

自由言論實踐의 보루를 死守하려다 밀려난 동아 기자 및 사원 1백50여명은 … 각자의 해임 여부와 관계없이 전원이 당초의 목표를 관철하기 위한 투쟁을 한층 확대하기로 결의했다. … 오늘날 굳어질 대로 굳어져 버린 지도층 언론인 스스로의 아집과 권위주의와 반민주적 비리는 그것을 깨부수려는 범국민적인 압력이 파도처럼 밀려 닥칠 때만 비로소 청산될 수 있다. 이제 우리는 그 파도를 몰고 올 대대적인 작업에 첫발을 내딛는다. (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鬪爭의 자세를 한단계 높이면서」,1975.3.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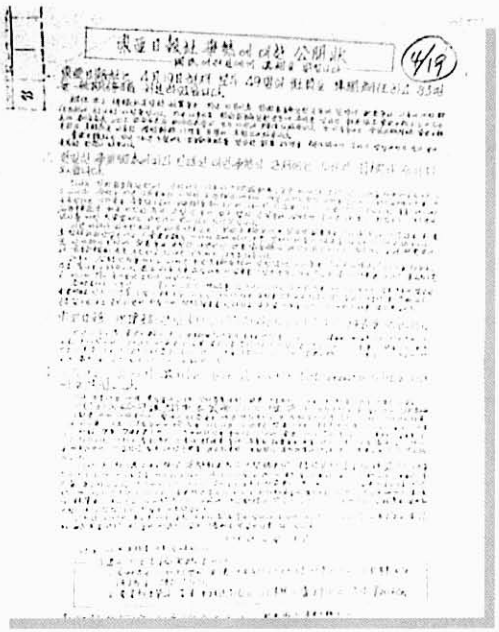
1974년 긴급조치 1호, 4호가 선포되고 학생, 종교인, 지식인 등이 '민청학련' 사건 등으로 대대적으로 투옥되는 상황에서 박정희 독재정권은 1974년 10월 19일 각 신문사 편집국장과 방송국장을 소집하여, "1)데모, 연좌, 퇴학처분, 휴강, 개강 등 학원 내의 움직임을 일체 보도하지 말아 달라, 2) 종교계의 민권운동을 보도하지 말아 달라, 3) 월남에서의 반독재, 반티우 운동 등에 대한 사태를 취합하지 말아달라, 4) 연탄기근 문제 등 사회불안을 조성할 우려가 있는 기사를 취급하지 말아 달라" 등 4개항의 '협조요청' 등을 하는 등 대언론장악을 시도했다. 이러한 과정에서 중앙정보부는 동아일보에 보도된 '서울농대생 데모' 기사와 관련하여 편집국장 송건호 등 3명을 연행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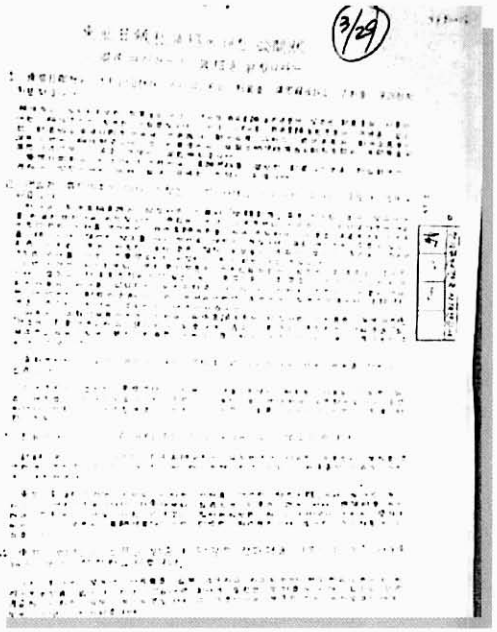
자유언론 실천선언

동아일보 기자들은 1974년 10월 23일부터 중앙정보부의 언론인 연행 등에 항의하며 철야농성에 돌입하고 10월 24일 오전 9시 15분 동아일보 편집국, 방송국 소속 기자 1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자유언론 실천 선언대회'를 개최했다.

동아일보 기자들의 〈자유언론 실천선언〉은 곧 전국의 신문방송 통신기자들의 자유언론선언 운동으로 확산되어, 조선일보사 기자 150여명이 '언론자유회복을

1975년 3월경 동아일보 3층 편집국 농성장에 시노트신부가 방문했을때





동아일보사의 기자해고에 대한 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 성명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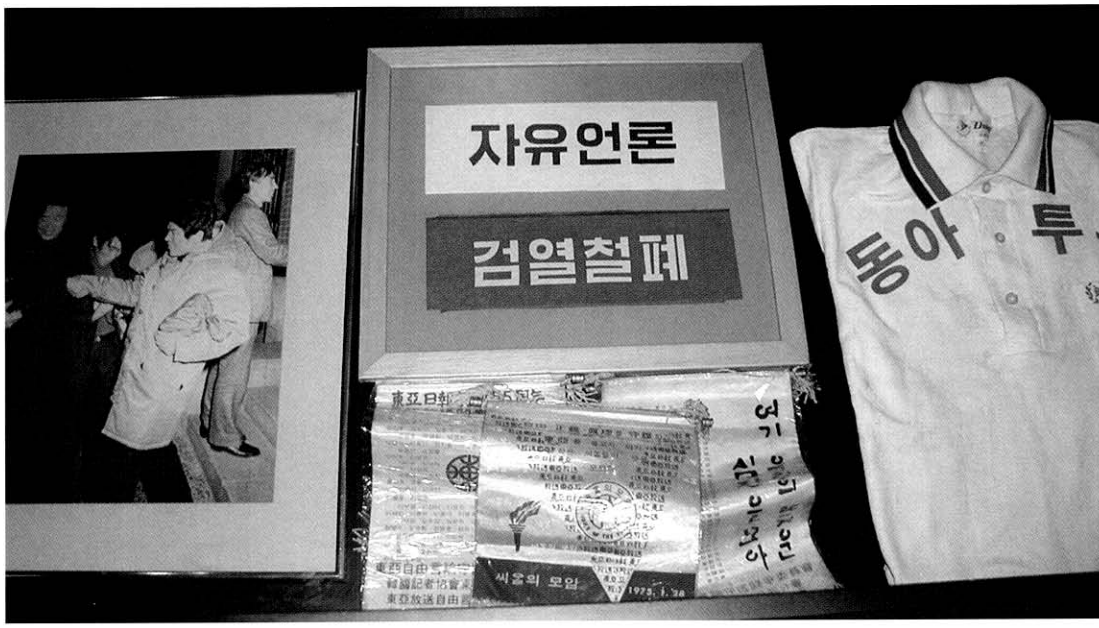
위한 선언문'을 채택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러한 기자들의 자유언론실천운동에 대해 박정권은 탄압을 자행하기 시작했다. 당국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국민적 성원 속에 동아일보사를 중심으로 자유언론실천운동이 계속 전개되면서 그에 따라 지면이 날로 쇄신되어가자 12월 중순부터 당국은 전대미문의 언론탄압을 시작하였다. 박정권은 광고주들을 위협하여 동아일보에 싣던 광고를 중단케 함으로써 동아일보의 존립자체를 위태롭게 하였다.

광고탄압은 동아일보에 머물지 않고 동아방송에까지 확대되었는데, 1975년 1월 8일 현재 33개 주요 광고주들이 방송광고 계약을 무더기로 해약하였고, 1월 10일 현재 그 수효는 50개사로 늘어나 동아방송의 수익은 84%의 결손에 직면하였다. 이같은 광고탄압에 직면하여 동아방송은 자유언론실행 총회의 결의에 따라 광고시간에 무더기 광고해약 사태를 알리고 "어떠한 사태가 오더라도 동아방송은 자유와 정의의 편에 서서 싸울 것을 다짐한다"는 내용의 방송을 내보냈다.

동아일보 · 동아방송에 대한 광고탄압의 소식이 전해지자 이를 규탄하는 외침이 곳곳에서 일어났다. 기자협회,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한국기독학생총연맹 등 여러 단체들이 성명을 내고 당국의 언론탄압을 규탄하였다.

해고로 맞선 경영층

그러나 광고탄압이 장기화되자 동아일보사 경영층은 점차 권력과 야합하기 시작하였고, 이 결과 자유언론실천운동에 참여한 기자들을 해고하는 사태가 발생하였다. 그리고 그 징후는 동아일보에 대한 상업주의적 경쟁심에서 기자들에게 자유언론실천선언을 하도록 부추기까지 하던 조선일보에서 먼저 나타나기 시작했다. 조선일보사는 1974년 12월 18일 '편집권 침해'를 이유로 외신부 기자 백기범, 문화부 기자 신홍범을 전격적으로 해임하였다.



김동현 당시 동아투위 위원이 기증한 사진, 패넌트, 머리띠 등

동아일보사도 기자들의 행동을 '위계질서파괴'로 단정하면서 1975년 2월 28일 동아일보 주주총회는 3명의 부사장과 이사들을 대거 퇴진시키고 고재욱 명예회장 아래 김상만 사장, 기우종 전무, 이동욱 주필로 3인체제를 구축했다. 이동욱 주필은 취임과 동시에 문제기사의 축소, 인사 및 복무규정의 강화, 유인물 제작 및 집회금지 등 자유언론실천을 규제하기 시작했다. 3월 8일 동아일보는 드디어 경영악화를 이유로 심의실, 기획부, 과학부, 출판부를 없애고 직원 18명을 전격적으로 해임하였다.

이에 대해 기자협회 동아일보 분회는 생존권을 박탈하는 것과 같은 다름없는 이 급작스러운 해임조치의 철회를 요구하는 동시에 해임된 사원들의 즉각 복직을 요구하며 3월 8일부터 무기한 농성에 들어갔다. 또한 당시 송건호 편집국장은 '해임된 사원들의 전원복직을 통한 사태해결'을 촉구하면서 사표를 던졌다. 지금은 고인이 된 송건호 선생님은 사표를 내면서 "해임된 사원들을 복직시켜 사태를 수습하지 않는다면 동아일보사는 10년 또는 20년후에 역사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마침내 강제축출당한 동아일보, 동아방송 150여명의 기자, 프로듀서, 아나운서, 엔지니어들은 1975년 3월 17일 자유언론실천과 지속적인 복직투쟁을 전개하기 위해 신문회관(현 프레스센터)에 모여 '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를 결성(초대 위원장 권영자)하고 매일 아침 동아일보 사옥 앞에 도열하여 회사측에 항의의 의사표시를 하였다.

한편 조선일보에서 강제축출되어 3월 12일 조선일보 자유언론 대책 12인 위원회를 구성했던 조선일보 해임기자들도 3월 21일 정태기를 위원장으로 하여 '조선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를 구성하여 동아투위와 보조를 같이 하였다. 그러나 당국은 이러한 무더기 해고에도 불구하고 동아·조선투위에 대한 탄압을 노골화하였다.